

JDI 정책동향 브리프

(2016-Vol. 41)

- JDI 정책동향 브리프는 제주발전연구원이 도외(국외, 정부, 타 시도 등)의 주요 정책 동향, 도내 현안 이슈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 정책 추진 참고자료
- 매월 2회(첫째 주, 셋째 주), PDF 형태로 관련 기관 송부 및 정보 공유
- 정책동향 파악 분야

환경·도시	환경정책, 기후변화, 지하수, 도시·지역계획, 교통정책 등
경제·산업	지역경제 정책, 제주지역 경제동향, 중국경제, 사회적 경제 등
사회·문화·관광	사회복지 정책, 관광진흥 및 관광개발, 지역재정, 문화정책, 여성정책 등

1. 환경·도시

정책동향 및 이슈	출처 및 일자	
① 국가공간정보 민간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	국토교통부	2016.09.29
② 주민참여형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환경부	2016.09.29
③ 쿠웨이트, 화장품 등록 절차 안내	KOTRA	2016.09.27
④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	환경부	2016.09.07
⑤ 제5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2016.09.28
⑥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진대응 체계 점검	국민안전처	2016.09.26

① 국가공간정보 민간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

○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중점데이터 중 공공과 민간에서 활용성이 가장 높은 국가공간정보가 조기 개방된다고 함
- 정부3.0 정책에 따른 데이터빅뱅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올해 연말까지 개방하기로 계획한

22종의 데이터 중 국민 편의 증진과 민간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활용도가 높은 10종을 9월 말까지 조기 개방하기로 결정

* (데이터빅뱅)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전략부터 품질진단, 데이터 구축까지 패키지로 공개하는 프로젝트

* 155개 기초지자체의 교통카드데이터(승차정류장, 승차시간, 탑승인원 등) 분석결과

- 이번에 개방되는 정보는 부동산 가격 및 소유정보와 면적에 관한 것으로 공간정보 (토지, 건물) 기반으로 용·복합한 지도 서비스

- 민간-산업계에서 자유롭게 가공분석할 수 있도록 파일 데이터 및 공개API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도에서도 공간정보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높지 않음

- 따라서 금번 국가공간정보 민간개방을 잘 활용하여 도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나 검색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며, 공공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정책 및 사업선정 및 집행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임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2016.09.29) / 이성용 연구위원

㉒ 주민참여형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 주요 내용

-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란 기피·혐오시설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국민 인식을 전환하여 향후 기피시설의 입지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임

-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기존 기피시설을 에너지시설로 전환하여 환경문제와 에너지 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독일 율데마을 : 마을 인근의 축산분뇨, 에너지 작물을 활용 바이오가스 발전(연 4~5백만 kWh생산)을 통한 주민 난방비 절감 및 소득증대를 도모함

* 충남 아산 친환경에너지타운은 2015년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아산시 환경기초시설(소각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이 밀집된 아산환경과학공원 일원에 조성 중임

* 소각장의 남은 열을 활용한 기업세탁공장과 가축분뇨바이오가스화 시설의 발전 폐열을 활용한 곤충 및 파프리카 생산 온실을 설치하여 연간 9억 8,000만원의 주민소득을 창출할 계획임

* 친환경에너지타운과 연계하여 아산환경과학공원, 장영실과학관 등과 연계한 복합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환경과 에너지분야의 관광명소로 조성할 예정임

- 정부에서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기파협오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다양한 수익(에너지 생산, 관광 등)을 창출토록 하는 제도로써 정부의 추가적 지원 없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먼저 정부주도로 우수사례 발굴 등 확대기반을 마련한 후 자연적으로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 1단계로 2017년까지는 정부 주도로 15~20개소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확대 기반을 구축함
 - * 2단계로 2018년부터는 민간주도로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주요 모델은 수출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임

- 향후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음
 - * 환경기초시설형 친환경에너지타운의 다양한 수익 모델 발굴과 기업·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함
 - *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이해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과정 개설 및 좌담화설명회 등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함
 - *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신규 참여 지자체와 향후 기업 등을 컨설팅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
 - * 환경부는 2018년까지 친환경에너지타운 10곳을 추가로 조성하여 국내 확산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과 장비를 개도국에 수출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타운이 국내·외에 널리 전파할 계획임
 - 2015년 선정 5곳(아산, 청주, 영천, 경주, 양산) : 2017년 말 준공
 - 2016년 선정 5곳(인제, 음성, 보령, 완주, 제주) : 2018년 말 준공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는 2016년에 광역폐기물처리장 일원을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지정하여 조성 중에 있음
 -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민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성공모델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함
 - * 향후, 음식물폐기물처리장 등 주민들이 기파협오하는 유사시설의 입지 선정뿐만 아니라 해당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데 도민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환경부(2016.09.29) / 김태윤 선임연구위원

③ UAE 화장품 시장 특징과 우리 기업 진출방안

○ 주요 내용

- 쿠웨이트 화장품 시장 동향
 - * 쿠웨이트 여성들, 월 800~1000달러를 화장품에 투자(40%가 향수, 메이크업 제품이 35%, 스킨케어 제품이 20~25%임)
 - * 쿠웨이트 화장품 시장규모는 매년 12% 이상 성장세
- 화장품 등록 개요
 - * 쿠웨이트 보건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쿠웨이트 현지 에이전트만 보건부에 제품 등록이 가능함
 - * 쿠웨이트 에이전트는 쿠웨이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쿠웨이트 보건부에 화장품을 등록하려는 한국 업체는 제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쿠웨이트 에이전트에게 전달해야 하며, 제품 관련 정보 변화 및 갱신사항은 바로 변경해야 함
- 화장품 등록 관련 제출서류
 - * 자유판매증명서(Free Sale Certificate, FSC)
 - * 제조면허증 사본과 GMP인증서 또는 ISO인증서
 - * 화장품 전(全)성분 비율표
 - * 생물학적 첨가제 미포함 증명서
 - * 안전증서(Safety Certificate)
 - * 모든 제품에는 제조번호와 날짜, 유통기간 표기가 필수임
 - * 제품 패키지에는 제조자명, 원산지가 포함된 정보들을 영문 또는 아랍어로 기재해야 함
 - * 위에 설명된 8가지 서류와 더불어, 연구자료가 포함된 제품 샘플들과 쿠웨이트 현지 에이전트의 첨부문(Cover Letter)이 쿠웨이트 보건청에 제출되어야 함
 - * 송장(Invoice)
 - * 판매되는 국가 목록
-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 * 식물 또는 허브 추출물이 첨가된 제품은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함
 - * 태반으로부터 추출한 지질, 단백질, 엔자임과 탯줄 추출물이 포함된 제품들은 해당 원료들이 신진대사, 내분비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며 감염원과 검출가능성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와 관계없다는 인증을 원산지의 보건부처로부터 받아야 함
 - * 미백, 슬리밍, 몸매관리, 탈모, 비듬 제거, 주름개선, 리프팅과 같은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제품은 안정성 및 효과를 증명하는 임상실험 결과를 제출해야 함

- * 제조업체는 칫솔, 미용용 헤어 및 보디 브러쉬, 수세미와 가발에 사용된 섬유의 종류들을 인증 받아야 함

○ 제주의 대응방향

- 에이전트 선정이 가장 중요
 - * 쿠웨이트 현지 에이전트는 쿠웨이트 보건부 제품 등록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므로, 에이전트의 역량이 절대적임
- 한국 업체, 협조가 필수적
 - * 쿠웨이트 보건부 제품 등록은 에이전트가 진행하더라도, 등록과정에 필요한 서류들은 한국 업체가 적시에 준비해서 에이전트 측에 전달해야 등록에 차질이 생기지 않음
 - * 흔히 한국 업체에서 서류 준비를 자력으로 해결하려다 쿠웨이트 현지에서 제품 등록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어떠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함
- 쿠웨이트 대사관 인증 유의
 - * 쿠웨이트 보건청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서류는 주한 쿠웨이트대사관 공증이 필요
 - *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료를 대사관 계좌로 입금해야 함
입금된 금액은 지참상 환불이 되지 않음. 제출한 서류가 반려되는 경우도 있으니 작성한 서류 확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 대사관 운영시간 및 운영일은 쿠웨이트 현지와 한국 공휴일을 동시에 따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더라도 서류인증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따라서 대사관의 휴일을 고려해 서류인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KOTRA (2016.09.27) / 박원배 선임연구위원

4]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

○ 주요 내용

-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란 기피·혐오시설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국민 인식을 전환**하여 향후 기피시설의 입지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임
 - * 도시가스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도시가스 공급
 - ** NIMBY(Not In My Back Yard) →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기존 기피시설을 에너지시설로 전환하여 환경문제와 에너지

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음

※ 독일 윤데마을 : 마을 인근의 축산분뇨, 에너지 작물을 활용 바이오가스 발전(연 4~5백만kWh생산)을 통한 주민 난방비 절감 및 소득증대

-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기피·혐오시설 및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님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피·혐오시설이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기피시설 입지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으로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필요
- 환경부장관은 9월 29일 충남 아산시 '아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현장을 방문해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제2의 새마을운동'모델로 발전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성공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향후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제2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제주의 대응방향

-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기피·혐오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다양한 수익(에너지 생산, 관광 등)을 창출토록 하는 제도로써 정부의 추가적 지원없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먼저 정부주도로 우수사례 발굴 등 확대기반을 마련한 후 자연적으로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현재 제주지역에 있어서 기피·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은 총 13개 정도이나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추진되는 지역은 금악리 1개소만 선정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조사됨
- 정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추진방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제2의 새마을운동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초반에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음
- 좋은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시기가 있으며, 현재의 정부의 추진 방향을 고려하였을 때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설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추진하여야 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환경부(2016.09.07) / 강진영 책임연구원

㉮ 제5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결과 발표

○ 주요 내용

- 제5회 교통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이 2016년 9월 28일 개최되었고, 논문, 정보디자인, 앱개발, 창업제안 4개 부분 14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발표되었음
-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은 교통데이터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교통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들은 적합성, 창의성, 실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었고, 올해의 경우 앱개발 부문 수상작에 대하여 전문업체의 기술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정보디자인 수상작 2개, 앱개발 수상작 5개, 창업제안 수상작 3개의 제목과 작품요약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제5회 교통데이터 활용공모전 입상작 요약>

구분	제목	작품요약
정보 디자인 (2)	카시트 톡톡히 알고 계셨나요?	영유아용 카시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화물차 사고를 낮춰줄 도로 위의 소후천사: 알파고(高)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다발구역을 통해 사고방지 예방법 및 쉼터 정보 제시
앱개발 (5)	Mr.신고왕	음성인식을 활용하여 도로 위 장애물 또는 장애 환경에 대한 신고하는 앱
	드라이브 코치	운전 주행 중 조작, 주의 요인 등 주행습관을 분석하여 안전운전 유도하는 앱
	링크드카	운전자의 졸음과 관련된 음성신호를 포착하여 졸음운전 방지 앱
	안전방패	일반적인 주행속도와 운전 차량의 주행속도를 비교하여 사고위험경보 제공 앱
	양심택시	택시 운행기록을 활용하여 안전 및 최적경로로 운행하는 택시를 알려주는 앱
창업제안 (3)	퀵서비스 물류의 혁신 HubQ	개별운송 퀵서비스를 상호연계하여 통합배송을 통한 비용절감 사업 제안
	영상처리기반의 실시간 빅데이터 생성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교통정보 수집기술 사업 제안
	Route Maker	유동인구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도로혼잡상황을 예측, 적절한 경로로 안내하는 사업 제안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지역에서도 축적되고 있는 다양한 교통데이터를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우선적으로 교통데이터를 발굴하고, 정리하여, 활용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수상작 중 앱개발 혹은 창업제안 부문의 경우 제주에서 활용하는 방안과 교통산업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국토교통부(2016.09.28) / 손상훈 책임연구원

㉔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진대응 체계 점검

○ 주요 내용

- 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진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9. 28(수) 부터 국민안전처를 포함, 중앙 및 지자체 그리고 공사·공단 등 지진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 20여 곳에 대하여 「지진대응 실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음
- 금번 점검은 9. 12(월)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지진대응이 적정했는지, 추가 여진 등 발생 시 주민안전 및 재산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임
- 주요 점검사항은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소관 업무에 대해 지진대응매뉴얼대로 조치했는지 여부, 만약 추가 여진 등 발생 시 빈틈없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금번 지진대응시 문제점·애로·건의사항 등을 파악할 계획임
 - * (예방·대비단계) 기관별 지진 매뉴얼 운영 및 정비 여부와 소관 관리시설물 안전진단 및 지진대비 장치 작동상태 점검 등
 - * (대응단계) 지진 정보전달-주민대피-통제-구조·구급단계에 걸쳐 각 기관별 상황발생시 현장작동 상태 여부
 - * (복구·지원단계) 지진피해지역 응급조치 가동 여부, 구호물자 확보·비축 상태 등
- 국민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당장 시급한 사항은 곧바로 조치토록 하고, 지진대응 매뉴얼 및 지진방재대책 개선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특히, 국민안전처의 지진대응 적정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간 지적된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음

○ 제주의 대응방향

-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역이 지진 공포에 휩싸여 있는 실정임

- 제주지역의 경우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예방대비단계에서는 공공시설과 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 부족, 예경보 체계 등, 대응단계에서는 대처요령 전달 등이 문제로 부각되었음
- 지진은 촌각을 다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재난관리체계를 단계별로 점검하고, 지진 대응매뉴얼과 대응체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야 하며, 제주 실정을 고려한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제주도 내의 지진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함으로 내륙지역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제주지역의 지진 영향과 문제점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국민안전처(2016.09.26) / 박창열 책임연구원

2. 경제·산업

정책동향 및 이슈	출처 및 일자	
① 제주도 중산간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초지면적 감소	제주신보	2016.09.18
② '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 선정	농림축산 식품부	2016.09.29
③ 수소차 택시·카셰어링 업무 협약식 및 차량 공개	중앙환경 에너지	2016.09.30
④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및 출자협의 법제화	기획재정부	2016.09.22
⑤ 농식품 수출 극대화 추진	농림축산 식품부	2016.09.21
⑥ 중국의 '식품안전 규제' 강화	코트라	2016.09.27
⑦ 소상공인 점포, '외국어소개 서비스' 신청하세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2016.09.27
⑧ 중국소비의 기회 활용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	판다 코리아	2016.09.19
⑨ 신기후체제 대응, 저탄소 인증 농산물과 무경운 농법 보급 필요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2016.09.23

① 제주도 중산간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초지면적 감소

○ 주요 내용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초지는 중산간 개발, 농경지 조성, 주택건설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 2016년 9월 18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초지면적은 1만 6382ha로서, 이는 2010년 1만 7289ha에 비해 5% 감소한 수치임
- 부동산 경기 활황에 따른 중산간 개발이 제주지역 초지감소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파악되며, 실제 도내 마을 공동목장은 1995년 82곳에서 지난해 57곳으로 연평균 3%의 추세로 감소하였음
- 초지법에서는 초지에서 행위제한 및 전용 방지를 위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전용에 대한 단속 등 초지 보전을 위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 초지법은 초지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제21조의2항 및 제23조의 초지에서 행위제한과 초지의 전용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음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도의 초지는 산림조성 및 지역 축산진흥을 위해 보전·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16년 기준 제주도의 초지 중 상급이상의 판정을 받은 토지는 전체 면적 중 약 30%에 불과한 바, 보완사업을 통해 우량 초지를 확장해 나가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따라서 (가칭)자산관리·신탁공사 등 전담기구의 설립을 통하여 초지를 보전하고, 관리가 부실한 토지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가칭)자산관리·신탁공사는 소유와 운영의 분리를 통해 운영되며, 지역 공유자산 활용 활성화 및 유실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도의 신탁공사임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제주신보(2016.09.18) / 고태호 연구위원

☑ **'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 선정**

○ **주요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농촌주변의 자연 속에서 가을의 풍미를 완연히 즐길 수 있는 '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을 선정 발표하였음
- 이번에 10선으로 선정된 농촌관광코스는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명소, 고택체험, 생태 숲체험, 산책 및 자전거타기, 생태공원, 전시관(박물관, 미술관 등), 역사유적지 등이 포함되었으며, 지자체 및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의(관광홍보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음
- 특히, 이번 농촌관광코스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협업을 통해 코스를 개발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농촌 관광자원(관광지, 체험휴양마을, 박물관, 지역명소 등)을 연계한 것이 특징임
- 이번에 선정된 코스로, 경기도는 모꼬지마을 등 6명소, 강원도는 용소막마을·성황림마을 등 6명소, 충북은 한두레마을 등 5명소, 충남은 부리수통마을 등 7명소, 전북은 산들강웅포 체험마을·성당포구마을·두동편백마을 등 5명소, 벽골제마을 등 5명소 두 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남은 의신사천마을 등 6명소, 경북은 토함산하범곡마을 등 6명소, 경남은 직전마을 등 6명소, 제주는 신평리어멍아방잔치마을 등 5명소 총 10개의 코스로 구성되었음
- 이번에 선정된 "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은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아늑한 농촌과 그 주변에서 가을을 느끼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다채롭고

매력적인 농촌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명소들로 구성됨

- 농촌지역 주변에서 가을을 만끽하며 자연을 느끼고 다양한 이색 체험을 통하여 평소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관광코스보다 의미 있고 색다른 관광코스를 추구하는 여행객들에게 유용한 여행 정보가 될 것으로 보임
- 선정코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농촌관광 포털 "우리나라좋은마을"(웰촌, 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도는 농촌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계절별·월별로 관광 테마를 선정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주위의 다양한 관광자원(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을 포함한 농촌관광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임에 따라 미리 준비가 필요함
- 특히, 제주지역은 색다른 관광코스를 추구하는 개별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선정된 감귤박물관→물영아리오름→따라비오름→신평리어멍아방잔치마을→혼인지 코스를 관광객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2016.09.29) / 강승진 선임연구위원

③ 수소차 택시·카셰어링 업무 협약식 및 차량 공개

○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11월부터 수소차를 활용한 택시와 자동차 공유(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
 - * 정부는 지난 7월 7일, 제10차 무역투자 회의에서 '전기차·수소차 발전전략'을 통해 수소차를 활용한 택시·자동차 공유(카셰어링)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
 - * 특이에 따라 관련업체와 지자체가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식을 열었음
 - * 수소 택시는 11월부터 울산에서 택시업체를 통해 15대를 운영하게 되며, 일반택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행되어 누구나 이용이 가능
- 차량 유지와 운행은 택시회사가 담당하고 차량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AS)는 현대자동차가 지원
 - * 수소 충전은 현재 운영중인 수소충전소 (매암충전소)에서 가능하며, 내년에는 2기의 충전소가 추가로 구축될 계획
 - * 자동차 공유(카셰어링)도 11월부터 광주에서 기차역,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수소차

15대, 전기차 15대를 활용해 운행함

* 단거리는 전기차, 중장거리는 수소차 활용

○ 제주의 대응방향

- 현재 제주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향후 거의 전차량이 전기차로 전환될 예정, 따라서 전기차를 이용한 카셰어링사업을 공공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중앙환경에너지(2016.09.30) / 김현철 연구위원

4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및 출자협의 법제화

○ 주요 내용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6.3.22. 공포, 9.23.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출연·출자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법제화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법제화
 - * (법적근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 출자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
 - * (대상규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 합계액이 5백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로 규정
 - * (절차) 공공기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면 기획재정부는 관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한 뒤 조사수행기관(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이 조사를 실시
- 공기업·준정부기관 출연·출자 사전협의 법제화
 - * (법적 근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
 - * 이는 기존에 지침으로 규정하던 출자 사전협의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 등에 관한 관리를 강화
-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항 추가
 - * 공공기관의 의무적 경영공시 항목에 임원 성별 현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 수당의 항목별 공시, 징계운영 현황, 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소송 현황 등 6개 항목을 추가
- 공공기관 임직원 청렴성 규정 강화

- *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 의제대상을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321개) 임직원으로 확대
- *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받고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제주의 대응방향

- 공공기관의 사업 타당성 조사, 출연·출자의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관리를 강화
- 공공기관 임직원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한층 강화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기획재정부(2016.09.22) / 고철수 책임연구원

㉔ 농식품 수출 극대화 추진

○ 주요 내용

- 농식품부는 지난 9.22부터 100일간 농식품 수출 비상 점검 체계 가동
 - * (추진 이유) 금년 들어 미국·아세안·GCC 등에서 수출 호조임에도 불구하고, ①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 더딘 회복세, ②제2의 수출 시장으로 급부상하던 중국으로의 수출의 예기치 못한 부진, ③최근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물류난이 가중, 향후 농식품 수출 위축 우려 등임
 - * 2016년 8월 말 기준 권역별 수출 증감율 : 미국(459백만 달러, 17.3%↑), ASEAN(714백만 달러, 5.8%↑), GCC(311백만 달러, 23.4%↑), 일본(751백만 달러, 3.5%↓), 중국(676백만 달러, 0.6%↓)
- (비상점검 TF) 농식품부·지자체·수출유관기관 등 참여, 매주 수출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품목별·국가별 수출 추진 상황 점검
- (수출 응원단) 수출 상위 50여개 주요 수출업체 방문·독려, 업체별 맞춤형 마케팅 사업 추진 지원 등
- (수출 물류비) 수출 독려를 위해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30억 원), 한진해운 사태 대응 추가 물류비 특별지원과 연계
- (소비 붐 조성) 해외마케팅·박람회 참가·미디어 홍보 확대, 국내외 선물 마케팅, 팝업 스토어 운영 등 집중 추진

■ D-100일 프로젝트 추진 체계 ■

목표	2016년 말까지 농식품 수출 81억 달러 달성 ※ 농식품 수출(8월 말 현재): 41.6억 달러, 목표 대비 51%	
중점 추진 방안	< 해외 소비촉진 >	< 국내 업체 독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마케팅 사업 및 박람회 참가 확대 - 방한 관광객·현지 오피니언 리더 대상 선물 마케팅 - 미디어·한류 마케팅 확대 - 상시 홍보·판매를 위한 팝업스토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확대
수출 비상점검 체계	< 수출 비상대책 TF·품목별 수출동향 점검 회의 가동 > ※ 국가별·품목별 목표 설정, 추진 상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 찾아가는 수출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해외지사 - 해외 유통망 확대 - 바이어 관리 강화 - 통관 지원(대사관 연계)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특별자치도도 농식품 수출 현황을 점검, 농식품 수출 극대화를 위한 단계별(단기·중기·장기) 추진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2016.09.21) / 고봉현 책임연구원

⑥ 중국의 '식품안전 규제' 강화

○ 주요 내용

-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식품안전 생산과 온라인 유통에 대한 관리가 감독이 강화될 것임
- * 식품생산과정에 대한 심사 강화조치인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 개정판(食品生產許可審查通則)'과 온라인 상 유통되는 식품에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위 수사방법' (網絡食品安全違法行爲查處辦法)이 강화될 예정
- 이들은 모두 지난해 10월 1일부로 시행된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음
-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은 기존 조항 중 신식품안전법에 저촉되거나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수정 또는 추가한 것으로 식품 제조허가증을 취득하고 검토하는 것에 대한 규정도 신설해 대부분의 식품 가공 사업들이 이 규정을 필수로 준수토록 했음
-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위 수사방법'은 신식품안전법의 온라인 상 유통되는 식품

관리에 관한 법규를 구체화한 것으로 입주한 판매업체에 대한 인터넷플랫폼 제공업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문화하고 문제 발생 시 공동 책임까지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식품안전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게 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 영업정지와 허가증 박탈,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것임

○ 제주의 대응방향

- 중국 정부의 엄격한 식품안전 관련법으로 인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으로 인한 제주지역 대중 수출기업들의 대비가 필요

* '신식품안전법에는' 맹독성 농약 사용을 금지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어긋난 표기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소득, 생산시설, 원료 등을 모두 몰수하고 제품가격의 5~10배의 벌금을 부과하며 생산 중지 및 허가증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중국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식품안전은 중국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중국정부의 식품안전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임

- 따라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주기업의 경우 신식품안전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며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코트라(2016.09.27) / 정지형 책임연구원

☑️ 소상공인 점포, '외국어소개 서비스' 신청하세요

○ 주요 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 소상공인 업체가 중국어, 영어, 일어 등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자기 점포가 소개되도록 하는 다국어 지원 사업을 추진

* 공단은 각급 지자체와 협조하여 희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문 상가소개 정보를 수집

* 한국관광공사는 수집된 상가정보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투어API(다국어 관광정보 개방 서비스)를 통해 대외 개방

- 이번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외국어 상가정보는 국내외 개발자 및 ICT기업, 포털업체 등 다양한 곳에 제공,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어짐으로써 향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외국어 상가정보가 널리 알려지게 하는 효과가 기대됨

* (서비스방식)어떤 치킨집 점주가 이 사업을 통해 자신의 점포를 신청해 두었다고 하면 향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이 점포인근에서 중국어로 '(예)삼계탕, 치맥'을

검색했을 때 이 점포가 중국어로 소개되는 방식

- 공단은 치맥(치칸맥주 및 관련 배달업소), 삼계탕 및 토속/향토/지역특산 음식점 약 5,000~10,000 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위한 업소를 신청 접수함
- * 모집기간은 9월 26일~11월 15일
- * (신청)자신의 점포가 속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에서도 가능
- *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간단한 점포소개 글, 사진 제출
- *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화전략실(TEL : 042-363-7143)

○ 제주의 대응방향

- 외국어소개 서비스사업 신청 독려 및 홍보
- 추후 자체 사업 발굴 및 추진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6.09.27) / 한승철 책임연구원

Ⅷ 중국소비의 기회 활용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

○ 주요 내용

- 2016년 8월 중국 사회소비품 소매판매 총액은 2조 7,540억 위안(한화 약 452조 4,546억 원)¹⁾으로 동기대비 10.6% 성장했으며 명목 성장률은 10.2%에 달함
- * 한편 2016년 1-8월 기간, 사회소비품 소매판매 총액은 21조 505억 위안(3,458조 3,866만 원)으로, 동기대비 10.3% 성장함
- 또한 2016년 1-8월 기간, 전국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30,210억 위안(496조 3,200억 원)으로, 동기대비 26.7% 성장함
- * 이중 실물상품의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2조 4,347억 위안(399조 9,968억 원)으로 25.5% 성장하였으며, 전체 사회 소비품 소매 판매액의 11.6% 비중을 차지함
- '2016년 상반기 중국 전자상무시장데이터 검사보고'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는 2조 6,000억 위안(436조 원)으로 동기대비 30% 성장함
- * 이 가운데 수출은 2억 9,00만 위안(334억 3,661만 원), 수입은 5,125억 위안(84조 1,98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남

1) 2016년 9월 27일 네이버 환율 적용(위안화:원화=1:164.29)

○ **제주의 대응방향**

- 이러한 중국 소비시장의 기회를 제주 발전의 초석으로 다지기 위해서, 첫째, 정식절차를 통한 수출, 둘째, 중국 마케팅 전략의 변화 대응, 셋째, 제주지역 마케팅 플랫폼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 알리바바 그룹에서 발표한 '타오바오 소비자분쟁 규범'에 따르면, 보따리상(代购)을 통한 회색 통관을 엄격히 통제하고 앞으로 수입상품은 정식 통관을 통해서만 판매 가능함
 - * 2013년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 수출된 제주삼다수가 세균기준 초과로 반송·조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도개발공사가 긴급 해명을 한바 있음
- 최근 중국 내에서 '왕홍(网红)'²⁾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들이 홍보·추천하는 제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음
 - * 중국 내 기업들은 왕홍을 마케팅 수단으로 삼고, 왕홍의 팔로워에게 맞춤형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소비로 이어지며 '왕홍 경제'가 형성되고 있음
- 제주지역은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여 제품 마케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므로, 중국 소비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의 마케팅 요충지가 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조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판다코리아(2016.09.19,26), Yakup(2016.06.13) / 이중화 책임연구원

㉨ **신기후체제 대응, 저탄소 인증 농산물과 무경운 농법 보급 필요**

○ **주요 내용**

- 정학균 외(2016)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저탄소 농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저탄소 농업정책 방향을 제시함
- 농가설문 조사 결과 저탄소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반농산물에 대한 저탄소 농업을 차별화, 단보당 수확량 감소를 완화, 노동력 투입의 증가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었음
-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은 수익성을 매우 중시하고, 직불제 등 인센티브 제공, 안정적인 판로 확보, 저탄소 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함
- 저탄소 농업 기술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시설재배 농가들은 1위는 최적비료 사용과 2위는 다겹보온커튼 및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 노지 재배 농가는 1위가 최적비료 사용 2위가 자가제조 농자재 사용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임

2) '왕홍(网红)'은 인터넷 스타를 의미함

-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의 한계감축비용을 분석한 결과, 무경운, 다겹보온커튼, 지열히트펌프, 수막보온시스템, 풋거름 재배, 최적비료 사용 등을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소비자 조사 결과, 구입 경험자의 절반가량만이 저탄소 인증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저탄소 인증 품목을 다양화하고 판매처를 확보하여 소비자들이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프리미엄도 다소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기후체제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탄소 농업기술 확대, 저탄소 농업기술개발 추진, 저탄소농축산물 소비 촉진, 배출권거래시장을 이용한 감축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는 '탄소 제로 섬'이고 전기차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 등 환경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농업분야에서도 저탄소 농업이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음
- 무경운 농법은 저탄소 농법 중에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밭작물 재배 면적이 넓은 제주지역에서 시행해 볼만한 정책임
- 무경운 농법으로 재배된 제주산 농산물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받도록 해서 소비자들이 선호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09.23)/ 안경아 책임연구원

3. 사회·문화·관광

정책동향 및 이슈	출처 및 일자	
① 지방인사혁신대상' 10개 기관 선정·확산	행정자치부	2016.09.26
② 관광두레 전국대회 개최	문화체육 관광부	2016.09.28
③ 국가노후준비위원회 구성으로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 계기 마련	보건복지부	2016.09.28
④ 「예술인 복지법」상 첫 시정명령 시행	문화체육 관광부	2016.09.30
⑤ 靑,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검토... '청탁금지법' 대책	서울신문	2016.09.30

① 지방인사혁신대상' 10개 기관 선정·확산

○ 주요 내용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혁신운영 우수사례를 선정하는「지방인사혁신대상」을 금년부터 시행
- 올해부터 인사혁신을 통해 주민행복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을 발굴해 시상하며, 이를 통해 지방인사제도 수준을 한차원 높이고 지역주민의 행복 증진에도 이바지한다는 취지
- 이 상은 지방자치 20년 경험과 자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선도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신설
-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인사제도 운영 혁신,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 공직책임성 확보 등 3개 분야별로 우수사례를 선정

<우수사례 선정 분야>

① 지방인사제도 운영 혁신	채용방식 다양화, 역량교육·평가, 전문성 제고 등
②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	유연근무제 활성화,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
③ 공직책임성 확보	비정상적 업무관행 개선, 청렴조직문화 조성 등

- 대상 선정방법은 심사위원회의 1~2차 서면심사를 통하여 10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지방 인사혁신대상' 발표대회에서 외부 인사전문가 및 지자체 인사담당관 현장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개 기관, 우수상 3개 기관, 장려상 6개 기관을 결정

※ 「지방인사대상」추진계획 통보(7월) → 기관별 우수사례 제출(10.24) → 분야별 우수사례 심사(11월 초) → 「지방인사대상」최종 선정(11월 말)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지역은 제주특별법을 통해 인사 및 조직에 관한 특례를 확보하여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음. 따라서 채용방식, 인재교육,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인사운영 방식에 대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제출
- 특히 정부 3.0 일환으로 일하는 방식의 개선 및 협치 매뉴얼을 통해 공직문화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례를 수집 발굴하여 인사혁신의 모범사례로 확산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행정자치부(2016.09.26) / 강창민 연구위원

㉒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질 제고 추진

○ 주요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두레사업 시행 4년 차를 맞이해, 9월 29일(목)부터 30일(금)까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2016 관광두레 전국대회'를 개최
-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기념품, 체험, 여행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체의 발굴에서부터 사업화 계획, 창업과 경영 개선까지 현장에서 밀착 지원을 하는 정책 사업
- 2013년 8월부터 시작된 관광두레사업은 37개 지역의 156개 주민사업체가 참여해 현재까지 32개 사업체가 창업과 경영 개선에 성공했다. 이 사업체들은 평균 8명의 실행인력을 신규로 채용했고, 이 중 14개 사업체는 월평균 1,000만원 이상의 고정 매출을 올리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
- '2016 관광두레 전국대회'에는 37개 지역 156개 주민사업체의 주민과 관계자 등 약 800명이 참가,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모으고, 주민들이 직접 개발해온 지역관광 상품들과 그 가치를 알리며 공유하는 데에 목적을 둬

<2015년 말 기준 관광두레 조성 현황>

광역	기초		
	1기(2013)	2기(2014)	3기(2015)
광주	-	-	동구
인천	-	(중구)	-
경기	양평	가평, 수원	연천, 이천
강원	(양구)	강릉, 인제, (철원)	홍천, 동해
충북	제천	(영동)	
충남	-	공주	홍성
전북	(부안)	남원, 김제, 무주	익산
전남	-	순천, 여수, 곡성, (신안)	구례, 해남
경북	청송	봉화, 울진	안동
경남	-	합천, 남해	거창
합계	3개 (2개:완료)	15개 (4개: 완료)	11개

○ 제주의 대응방향

- 관광두레 사업에서 제주의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형 지역주민참여 관광사업의 지원과 발굴 노력이 절실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문화체육관광부(2016.09.28) / 신동일 연구위원

③ 국가노후준비위원회 구성으로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 계기 마련

○ 주요 내용

- 국가는 2015년 5월 28일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여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국민들이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러한 후속 조치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앞으로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등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심의할 것임
-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 노후준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올해 연말을 목표로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17~21)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에는 ①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②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③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계획으로 알려짐

- 제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은 1)전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cycle of life), 2)일자리와 소득보장제도를 연계한 유연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flexicurity), 3)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 (aging in place), 4)한번 방문으로 다양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 제공 및 연계(one-stop, multi-service)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지역은 타시도 보다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아울러 신노년층(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7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노후준비지원을 정책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시점이 이르렀음
- 국가의 「노후준비지원법」(2015. 5. 28. 제정)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보건복지부(2016.09.28) / 고승한 연구위원

④ 「예술인 복지법」상 첫 시정명령 시행

○ 주요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게 최초로 시정조치 명령함
- 동 법을 위반한 사건은 연극 기획자 ㄱ씨가 예술인 6인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하여,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하면서 사건화 되었음
 - *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접수, 소송비용 지원, 법률상담, 조정, 행정조치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지원 시스템
- 예술인 6인이 3개월간 ㄱ씨가 기획한 연극에 출연하였으나, 출연료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음. 이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출연료 지급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서 미지급된 출연료 전부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시행하게 됨
- 연극 기획자 ㄱ씨가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등 정부 재정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향후 정부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지역에서도 예술가들이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대상 홍보 기회 확대가 필요함
- 만약 문화예술 사업주의 불공정행위 피해를 입을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 홍보 필요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문화체육관광부(2016.09.30) / 문순덕 책임연구원

5 靑,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검토... '청탁금지법' 대책

○ 주요 내용

-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에 따른 골프장 등 내수업계의 충격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 그러나 국민정서와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변수임
- 현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들은 한번 라운딩을 할 때마다 그린피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1만2000원과 개별소비세에 연동되는 부가세인 교육세(36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등 약 2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1,120원)을 추가로 내고 있음
 - * 따라서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면 회원제 골프장 이용 시 부담하는 비용이 1인당 약 2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 *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급에 속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받아들여 질 수 있을 지가 변수로 지목됨. 또 개별소비세를 적용 받지 않고 있는 퍼블릭 골프장들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임

○ 제주의 대응방향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제주소재 골프장을 비롯한 전국 골프장들의 '부킹(예약) 절벽'이 발생하여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더라도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5년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25%(5,250원, 75% 면제)를 부과하고 있음
- 현재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개별소비세 완전 면제를 위한 대정부 및 국회 설득논리를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
- 따라서 개별소비세 완전 면제를 위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고, 또한 전국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제주소재 회원제 골프장과 퍼블릭 골프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와 향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서울신문(2016.09.30) / 최영근 전문연구위원

※ 'JDI 정책동향 브리프'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제주발전연구원(<https://www.jdi.re.kr/>)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됩니다.